

광주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사실로’

경찰, 동·서·광산구의회 직원 5명
여행사 대표 9명 등 총 14명 송치
“의원 수혜여도 법적 책임은 별개”
직원들만 처벌 수사 결과에 ‘뒤틀림’

광주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지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를 사실로 보면서도 수혜자인 의원들의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

르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광주 동·서·광산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5명과 서로 다른 여행사 대표 9명 등 14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 구의회가 주관한 국외 출장 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국의 출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자부담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항공료 등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나라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를 늘렸고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충당해 출장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여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수혜를 본 건 국외 출장을 떠난 각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피했다. 이득을 보게 된 과정에 의원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과 혐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라며 “범행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까지 갈만한 혐의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련자 송치로 광주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 등으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한다며 전국 단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남·북구의회를 제외한 4개 지방의회에 대해 수사했다. 다만 다른 지방의회와 달리 광주시의회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광주 지역 공직 사회에선 뒤틀림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혜택을 본 건 의원들인데, 책임은 직원들만 지게 된 것 아니냐”며 “여행사를 심의해서 선정하는 의원들이 정말 부풀리기를 몰랐을까 싶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설령 몰랐다고 한들 본인들의 국외 출장을 도왔던 직원들이 처벌받을 판인데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게 가장 놀랍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직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개해 했다.

한편 전남경찰청도 전남도의회를 포함, 16개 지방의회에 대해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 수사로 전남경찰청에 입건된 이들은 업무 담당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20여명인데, 각 지방의회 소속 의원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영 기자

소방법 어긴 소방사진 전시회 ‘빈축’

광주 남구청사 1층서 14일부터 진행
‘방화서터 선 침범’ 지적에 이른 첩거

광주 남구청사에서 진행된 전시가 또 한번 소방법을 위반해 빈축을 샀다.

18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제78회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광주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상 사진은 올 한해 광주시 소방본부의 활동이 담긴 20점이다. 이와 함께 소방의 날(11월9일)을 기념해 쓴 편지를 전달해주는 ‘편지 우체국’과 소방 캐릭터 포토존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시는 광산구 평동역(10월31일~11월6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11월7~13일)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남구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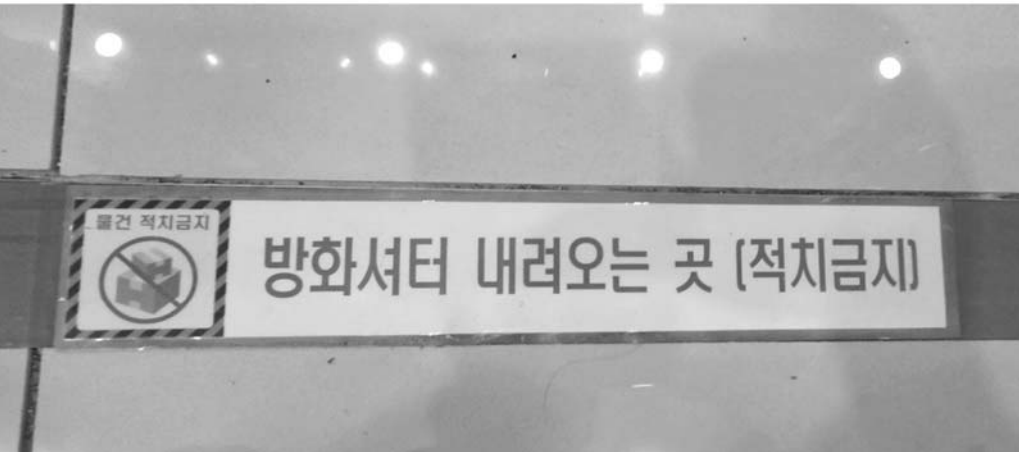
문제는 다수의 사진과 전시 팸플릿이 화재 시 방화서터가 내려오는 선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방시설차질및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6조에 위배된다. 이 조항에는 방화구획·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61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소방 측과 전시 협의 과정에서 방화서터가 내려오는 선에 작품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설치 직후 확인에 나섰을 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일 소방 대피 훈련이 있었는데, 직원 다수가 이동하면서 전시물이 밀려난 것 같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바 다른 장소를



광주시 소방본부가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남구청사 1층에서 올 한해 시 소방본부의 활동이 담긴 사진 20점을 전시했으나, 그 장소가 화재 시 방화서터가 내려오는 선에 걸쳐 있어 ‘소방법 위반’ 빈축을 샀다. /서형우 기자

물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부소방서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전시물을 모두 철거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설치 당시 선 바깥으

로 배치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밀리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행사 진행에 있어 운영 과정 또한 세심히 살펴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형우 기자

광주 남구서 ‘고병원성 AI’ 발생…방역 조치

지난 11일 야생 조류 폐사체서 검출
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구역’

광주 남구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봉선동 한 거리에서 주민이 야생 조류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해당 개체를 검사한 결과 H5형 AI를 확인했고 이어 14일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도 검출됐다.

고병원성 AI는 위험도가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AI 검출 다음 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와 남구는 1·2차 현장 방역 및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 또 가금 사육 농가 65개소에 방역 강화를 알렸으며 광주축산농협에서도 야생조류 서식지 방역에 나섰다.

남구는 지난 14일 반경 10km 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소독도 실시했다.

남구 관계자는 “예찰활동 근무반을 주3회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상 징후나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방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장동혁 ‘참배 방해’…집시법 위반 수사

광주 북부경찰, 시민단체 등 대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찬웅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참배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장동혁 대표의 참배를 막으려 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물러가라” 등 고성이가 이어지며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장 대표 측은 약 18분간 대기한 끝에 간단한 묵념만 남긴 채 이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

월세 인상 거부 세입자 무고한 50대 ‘실형’

월세 인상을 거절한 세입자를 상대로 허위 고발을 한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은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의 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는 B씨가 “외국산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며 광주 서구청 등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구청 직원들이 해당 식당을 점검한 결과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악감정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